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제·지역협력

박영숙 PCSD 국제·지역협력위원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차원에서 표출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기 또는 수질오염 등의 공해로 상징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가하면 오존층파괴나 사막화 등과 같은 전 인간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등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지구규모의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국제경제의 동향을 무시한 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나라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그 해결도 상호의존관계로서만이 풀어낼 수 있다.

지역적 문제가 되었건 국제적 문제가 되었건 환경문제는 한 영역,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Local)간의 권역(Regional)간의 그리고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인류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사회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의, 공적인 부문(정부)과 사적인 부문(기업,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없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0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6개 분과위원회 중에 국제·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 위원회에 부과된 과제는 ① 기후변화협약대응전략 등 국제환경협약 대응체계 구축 ② 국가 및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③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기구설치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현재 의제21 이행상황검토와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의 세부과제 도출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예측컨대 의제21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96년도에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진척사항을 평가 및 점검하는 한편 2002년에 개최예정인 리우+10에 대비해 그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발전을 위한 연차 국가보고서 작성 관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현재 검토중인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 지원책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소위원회에서는 13일간의 회기를 25일에 끝낸 금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34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은 여러 영역이 연관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제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향후 업무추진의 방향은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모색에 두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 현존하고 있는 협력관계는 유엔기구인 UNEP와 ESCAP 등을 통해서, ASEAN 등의 지역과 국가간 협력에 의하는 것, 민간산업조직간의 협력 또는 NGO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접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환경협력, 중국과의 협력, 북한과의 공동과제개발 등의 논의가 빈번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서 특히 인접국가들간의 협력 없이는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협력은 취급하는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것이어서 각자의 의견을 조정해내는 일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제적인 현상에 못지않게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을 위한 실천방안의 도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은 지금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34
금번 헤이그의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의 확정이 내년 5월로 미루어졌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이기주의의 한 면을 읽게 한다. PCSD의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대응하는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24
다행인 것은 뒷늦게나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단위의 실천주체인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1995년 부산광역시를 필두로 현재 우리나라의 248개 지자체 중 130개의 자치체가 <지방의제21>을 이미 수립하였고 47개 지자체는 수립중에 있다. 이들 지방의제추진기구들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9월27~29일에 99년도에 제주도에 이어 인천에서 제2차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적연대관계로는 ICLEI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92년도에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바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은 시민, 기업, 정부간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지방의제21수립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관료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이익을 깎아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추진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정부

3623
행정예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가 공인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그 폭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켜야하는 지속가능한 국가건설의 행동지침인 지방의제21의 접근이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부처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식

보
그런 점으로 미루어 금번 대통령령(16946호)으로 출범한 PCSD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각부처의 제각각의 정책과 집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서 PCSD의 책임이 막중하다.

PCSD가 정부의 통합정책에 기여할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33인으로 되어있는 이 위원회에는 환경관련 NGO 및 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민간위촉위원 20인과 환경과 발전관련 12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복지노동수석이 간사직을 맡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되었던 PCSD의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종일 워크숍에서 한 부처의 장관이 지적한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간의 의견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좁혀지고 통합정책에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PCSD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로인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는 이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경영으로의 단계적인 산업구조개편을 성취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 기초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으로의 기본방향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생태효율이 높은 경제체제, 즉 저환경비용, 고생산효율의 사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환경부 2000. 6)

산업계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생태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기위한 정부의 적절한 시책과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필수적이라 할 강요당하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구조의 변화는 지속불가능한 소비구조의 개혁을 선택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할 뿐만아니라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수 있다. 산업계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산업계는 변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자율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 하는 선택만이 남아있을뿐 인류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60년대말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와 90년대의 <한계를 넘어서 -Beyond the Limits> 보고서는 인류파멸의 징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정리하거나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성장추세가 계속되는 한 지구는 100년에 파멸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한편 현세대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류의 생존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서 건설해서는 안된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

필수적인

110을

적 대응책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2002년도의 리우TID를 기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
시책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 그 한부분을 국제·지역협력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안
고 있다.

강제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제·지역협력

박영숙 PCSO 국제·지역협력위원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차원에서 표출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등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지구규모의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국제경제의 동향을 무시한 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나라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 해결도 상호의존관계로서만이 풀어낼 수 있다.

지역적 문제나 되건 국제적 문제나 되건 환경문제는 한 영역,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Local)간의 권역(Regional)간의 그리고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인류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사회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의, 공적인 부문(정부)과 사적인 부문(기업,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없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0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6개 분과위원회 중에 국제·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 위원회에 부과된 과제는 ①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등 국제환경협약 대응체계 구축 ② 국가 및 지방의 제21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③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기구설치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현재 의제21 이행상황검토와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의 세부과제 도출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예측컨대 의제21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96년도에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진척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한편 2002년에 개최예정인 리우+10에 대비해 그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발전을 위한 연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현재 검토중인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 지원책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은 여러 영역이 연관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향후 업무추진의 방향은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모색에 두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 현존하고 있는 협력관계는 유엔기구인 UNEP와 ESCAP 등을 통해서, ASEAN 등의 지역과 국가간 협력에 의하는 것, 민간산업간의 협력 또는 NGO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접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환경협력, 중국과의 협력, 북한과의 공동과제개발 등의 논의가 빈번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을 위한 실천방안의 도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들은 국가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은 지금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번 헤이그의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의 확정인 내년 5월로 미루어진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이기주의의 한 면을 읽게 한다. PCSD의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대응하는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에서의 협력관계는 지방단위의 실천주체인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1995년 부산광역시를 필두로 현재 우리나라의 248개 지자체 중 130개의 자치체가 <지방의제21>을 이미 수립하였고 47개 지자체는 수립중에 있다. 이들 지방의제추진기구들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9월27~29일에 99년도의 제주도에 이어 인천에서 제2차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ICLEI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92년도에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바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은 시민, 기업, 정부간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지방의제21수립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관료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관계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추진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정부 행정예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가 공인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그 폭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켜야하는 지속가능한 국가건설의 행동지침인 지방의제21의 접근이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부처와의 정책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금번 대통령령(16946호)으로 출범한 PCSD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각부처의 제각각의 정책과 집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서 PCSD의 책임이 막중하다.

PCSD가 정부의 통합정책에 기여할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33인으로 되어있는 이 위원회에는 환경관련 NGO 및 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민

간위촉위원 20인과 환경과 발전관련 12개부처 장관들이 당연히 참여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복지노동수석이 감사직을 맡고 있다. ^{1300명 정도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되었던 PCSD의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총 9} 워크숍에서 한 부처의 장관이 지적한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간의 의견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좁혀지고 통합정책에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PCSD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로인한 산업계에 ²⁴² 미치는 영향과 ⁵¹ 과제는 이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경영으로의 단계적인 산업구조개편을 ^{필요로} 성취해 내는 것이다.

그 기초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으로 ²⁴² 기본방향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 ⁵¹ 바꾸는 것이다. 생태효율이 높은 경제체제, 즉 저환경비용, 고생산효율의 사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환경부 2000. 6). 산업계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생태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기위한 정부의 적절한 시책과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필요로} 따라주어야 한다.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구조의 변화는 지속불가능한 소비구조의 개혁을 선택도해 낼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 할 뿐만아니라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수 있다. 산업계가 이를 계율리한다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산업계는 강요당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 ²⁴² 하는 선택만이 남아 있을뿐 인류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60년대말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와 90년대의 <한계를 넘어서 -Beyond the Limits> 보고서는 인류파멸의 징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정죄하거나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성장추세가 계속되는 한 지구는 100년 안에 파멸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현세대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류의 생존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서 ²⁴² 건설해서는 안된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대응책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2002년도의 리우+10를 기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시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그 한부분을 국제·지역협력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필요로} 안다.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제·지역협력

박영숙 PCSO 국제·지역협력위원회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차원에서 표출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등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지구규모의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국제경제의 동향을 무시한 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나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해결은 상호의존관계로서만이 풀어낼 수 있다.

지역적 문제이건 국제적 문제이건 환경문제는 한 영역,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Local)간의 권역(Regional)간의 그리고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인류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 한 지역사회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의, 공적인 부문(정부)과 사적인 부문(기업,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없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0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6개 분과위원회 중에 국제·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 위원회에 부과된 과제는 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대응체계 구축 ② 국가 및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③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기구설치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현재 의제21과 기후변화협약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의 세부과제 도출을 의뢰해 놓고 있다.

예측컨대 의제21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96년도에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진척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한편 2002년에 개최예정인 리우+10에 대비해 그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발전을 위한 연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검토중인 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침서 작성 등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은 여러 영역이 연관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하므로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향후 업무추진의 방향은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모색에 두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 현존하고 있는 협력관계는 유엔기구인 UNEP와 ESCAP 등을 통해서, ASEAN 등의 지역과 국가간 협력에 의하는 것, 민간산업간의 협력 또는 NGO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접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환경협력, 중국과의협력, 북한과의 공동과제개발 등의 논의가 빈번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을 위한 실천방안의 도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들은 국가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 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은 지금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번 헤이그의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의 확정이 내년 5월로 미루어진것이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이기주의의 한 면을 읽게 한다. PCSD의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대응하는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에서의 협력관계는 지방단위의 실천주체인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248개 지자체 중 130개의 자치체가 <지방의제21>을 이미 수립하였고 47개 지자체는 수립중에 있다. 이들 지방의제추진기구들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9월27~29일에 제2차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ICLEI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은 시민, 기업, 정부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지방의제21수립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관료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관계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추진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정부 행정예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가 공인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그 폭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켜야하는 지속가능한 국가건설의 행동지침인 지방의제21의 접근이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부처와의 정책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금번 대통령령(16946호)으로 출범한 PCSD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PCSD가 정부의 통합정책에 기여할수 있는 가능성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33인으로 되어있는 이 위원회에는 환경관련 NGO 및 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민간위촉위원 20인과 환경과 발전관련 12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복지노동수석이 간사직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개 부처에서 각각 실무진을 13명 파송하고 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성되어

있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되었던 PCSD의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한 부처의 장관이 지적한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간의 의견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좁혀지고 통합정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CSD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과제는 이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경영으로의 단계적인 산업구조개편이다.

그 기초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으로서의 기본방향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 그리고, 생태효율이 높은 경제체제, 즉 저환경비용, 고생산효율의 사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환경부 2000. 6). 산업계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생태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기위한 정부의 적절한 시책과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구조의 변화는 지속불가능한 소비구조의 개혁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산업계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의해 산업계는 강요당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라는 선택만이 남아 있을뿐 인류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성취해내야만 한다.

60년대말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와 90년대의 〈한계를 넘어서 -Beyond the Limits〉 보고서는 인류파멸의 징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정죄하거나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성장추세가 계속되는 한 지구는 100년 안에 파멸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현세대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류의 생존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대응책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2002년도의 리우+10를 기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시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그 한 부분을 국제·지역협력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안다.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제·지역협력

박영숙 PCSD 국제·지역협력위원회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차원에서 표출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등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지구규모의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국제경제의 동향을 무시한 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나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해결은 상호의존관계로서만이 풀어낼 수 있다.

지역적 문제이건 국제적 문제이건 환경문제는 한 영역,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Local)간의 권역(Regional)간의 그리고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인류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 한 지역사회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의, 공적인 부문(정부)과 사적인 부문(기업,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없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0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6개 분과위원회 중에 국제·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 위원회에 부과된 과제는 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대응체계 구축 ② 국가 및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③ 지방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기구설치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현재 의제21과 기후변화협약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의 세부과제 도출을 의뢰해 놓고 있다.

예측컨대 의제21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96년도에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진척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한편 2002년에 개최예정인 리우+10에 대비해 그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발전을 위한 연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검토중인 자치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침서 작성 등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은 여러 영역이 연관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하므로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향후 업무추진의 방향은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모색에 두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 현존하고 있는 협력관계는 유엔기구인 UNEP와 ESCAP 등을 통해서, ASEAN 등의 지역과 국가간 협력에 의하는 것, 민간산업간의 협력 또는 NGO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접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환경협력, 중국과의협력, 북한과의 공동과제개발 등의 논의가 빈번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을 위한 실천방안의 도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 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국가환경은 지금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번 헤이그의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의 확정인 내년 5월로 미루어진것이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이기주의의 한 면을 읽게 한다. PCSD의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대응하는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에서의 협력관계는 지방단위의 실천주체인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248개 지자체 중 130개의 자치체가 <지방의제21>을 이미 수립하였고 47개 지자체는 수립중에 있다. 이들 지방의제추진기구들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9월27~29일에 제2차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ICLEI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은 시민, 기업, 정부간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지방의제21수립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관료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관계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추진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정부 행정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가 공인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그 폭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켜야하는 지속가능한 국가건설의 행동지침인 지방의제21의 접근이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부처와의 정책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금번 대통령령(16946호)으로 출범한 PCSD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PCSD가 정부의 통합정책에 기여할수 있는 가능성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33인으로 되어있는 이 위원회에는 환경관련 NGO 및 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민간위촉위원 20인과 환경과 발전관련 12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복지노동수석이 간사직을 맡고 있다. 위원회의 실무진은 12개 부처에서 각각 파송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되었던 PCSD의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한 부처의 장관이 지적인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간의 의견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좁혀지고 통합정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CSD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과제는 이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경영으로의 단계적인 산업구조개편이다.

그 기초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으로서의 기본방향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 그리고, 생태효율이 높은 경제체제, 즉 저환경비용, 고생산효율의 사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환경부 2000. 6.). 산업계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생태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기위한 정부의 적절한 시책과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구조의 변화는 지속불가능한 소비구조의 개혁을 선택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산업계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산업계는 강요당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라는 선택만이 남아 있을뿐 인류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성취해내야만 한다.

60년대말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와 90년대의 <한계를 넘어서-Beyond the Limits> 보고서는 인류파멸의 징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정죄하거나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성장추세가 계속되는 한 지구는 100년 안에 파멸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현세대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류의 생존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대응책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2002년도의 리우+10를 기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시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그 한 부분을 국제·지역협력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안다.

SAMSUNG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우) 135-708

환경안전팀 3458-3033~7

환경연구팀 3458-3140~4

Fax. 3458-3149

원고청탁서



박 영숙 PCSD 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季刊誌 ‘그린삼성’ 편집실 입니다.

‘그린삼성’은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과 산업계 및 학계의 연구 결과 그리고 삼성의 녹색경영 사례 등을 소개하는 환경정보지로 정부, 산업계, 학계, 환경관련 유관단체 및 삼성내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삼성 2000년 겨울호 특집을 준비하면서 “국제·지역협력과 환경문제”라는 주제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청탁을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 게재호 : 2000년 겨울호
- 컬럼명 : 특집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계의 역할”
- 내 용 : 국제·지역협력과 환경문제(가제) - 별첨 참조
- 원고분량 : A4 사이즈로 4 장(200자 원고지 22매 내외)
- 원고마감 : 2000년 12월 5일(화요일)
- 발송방법 : 원고는 E-Mail(ID: ymjeong@samsung.co.kr)로 송부바랍니다.
- 연 락 처 : 그린삼성 편집실, 정 예모 차장 (Tel. 02-3458-3143)
강 유경 사원 (Tel. 02-3458-3023)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겨울호 특집 기획 방향 및 필진(안) >

□ 특집 기획 배경 :

지난 9월 발족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각 분과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의 세기에 있어서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산업계의 역할을 제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현안과제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의 의미, 산업계가 해야 할 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목(가제) 및 필진(안)

1. 국토보전과 경제발전

- 유 재현 PCSD 국토보전분과 위원장(세민재단 이사장)

2.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 이 정전 PCSD 수자원분과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장)

3. 생태보전과 기업

- 최 열 PCSD 생태·보건분과 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

4. 에너지 절약과 산업계의 역할

- 송 보경 PCSD 에너지대책분과 위원장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5. 환경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박 종식 PCSD 산업과 환경분과 위원장(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6. 국제·지역협력과 환경문제

- 박 영숙 PCSD 국제·지역협력분과 위원장(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원고 제목은 분과위원장께서 좋으신 제목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